



여의도연구원

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

Vol.2014-10

여연브리프

YDI BRIEF

발행일 2014년 12월 11일

사회적 협약의 정치를 위한 모색 (Ⅲ) -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-

- 목 차 -

요 약

I. 논의배경	1
II. 스웨덴 사회적 협약의 정치	3
III. 스웨덴 모델 성과와 비판	9
IV. 한국사회의 대타협 적용 시사점	12
참고문헌	16

작성 : 박성찬 연구위원
(02) 2070-3315

《 요 약 》

- 스웨덴 사회협약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는, 복지국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식 협약 추진과정으로부터 한국의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
 -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적 대타협 추진,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협약의 필요성 제기 등과 함께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, 공무원 연금개혁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
- 스웨덴은 1900년대 전후 사회계급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나라였으나, 대공황 등 경제적 시련을 배경으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고, 정부의 개입 보다는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, 노사중앙 단체들이 주도한 ‘위로부터의 협약’을 추진한 모델임
- 스웨덴식 사회적 협약의 기본 협정은 ‘살프요바덴 협약’과 ‘렌-마이드너 모델’(Rehn-Meider Model)로 압축
 - 살프요바덴 협약은 1933년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자, 집권 사민당 정부의 중재 아래 스웨덴 노동자총연맹(LO)과 경영자총연합회(SAF)가 5년간 협상 끝에 노동시장위원회, 임금협상, 노동자 해고, 노동쟁의 등 4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
 - ‘렌-마이드너 모델’은 경제목표를 완전고용과 산업합리화,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설정하고, 이를 위해 연대임금정책과 긴축재정정책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, 핵심내용은 ‘동일노동 동일임금’을 원칙으로 하는 연대임금정책임
 - 1930년대까지 스웨덴 노동자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, 노사간 극한적 대립을 배제한 평화적 타결을 이룸으로써, 스웨덴이 갈등사회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함

-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보장하고, 빈부격차를 해소하며,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모델로 평가됨
 - 사회적 대타협은 정치적 안정과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경제성장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, 적대적 노사관계나 노동자의 분열과 대립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
- 스웨덴식 복지국가모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저력을 재확인시켜 주었음
 -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5.5%을 기록하고,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이 건전하여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
- 스웨덴식 복지 유지에는 국민의 피와 땀이 요구되는데, 이는 높은 세금부담률로 귀결됨
 - 세금부담률 47%로 덴마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고, 많게는 소득의 55%까지 부담하며, 기업을 경영하면 직원 1인당 임금의 31%를 내는 피고용세가 있고, 유류세도 57%나 되며, 특별소비세도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
- 한국사회의 사회적 협약은 국민대통합의 용광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, 사회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, 시민사회와 노동·기업·정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 - 사회적 협약은 각 주체들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며, 경제성장 등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일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면 추진 자체가 힘들
 - 공존상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, 노동계는 노동 유연성과 임금 억제 방안을, 사용자는 고용확대 및 재원부담 증대 방안을, 정부는 복지 확대 및 실업 대책 등 분명한 정책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사회협약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I. 논의배경

-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갈등사안이 증대하고 있으며, 단지 노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,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, 공무원 연금개혁 등 당면 과제가 많음
 -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, 복지 관련 공약과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‘국민 대타협위원회’ 설치를 약속
 - 10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, 여야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제안
 -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
- 최근에도 유럽에서는 사회적 협약을 계속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경제난과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음
 - 아일랜드는 노사 대타협의 모범국가로, ‘국가재건 프로그램’ 협약 체결 이후 연평균 6~7%의 고성장기를 거치면서 ‘유럽의 낙오자’에서 ‘켈틱 타이거’로 변모

켈틱타이거(Celtic Tiger; 켈트족 호랑이)

- 2000년대 중반까지 켈틱 타이거로 불리며 유럽 강소국의 모델
 - 시장 개방과 규제 개혁,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및 파업자제, 법인세 유럽 최저수준(12.5%) 등을 통해 고속 성장
-
- 네덜란드는 노사 대타협으로 고용률을 크게 올린 ‘고용의 기적’으로 통하고, 사회적 협약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
 - 독일 ‘하르츠(Hartz) 개혁’은 대표적인 노동개혁 성공사례로,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여 고용률을 끌어올린 정책

- 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, 아일랜드와 네덜란드, 스웨덴의 사회협약의 기본 정신과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
 - 스웨덴은 사회계층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 '위로부터의 협약'을 이끌어냄으로써,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임
 - 한국사회 노사갈등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,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는 난망한 상태
 -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주장이 대두되었는데, '대타협 성사'보다는 '예정된 파기 수순'이라는 비판도 존재
- 사회적 협약 추진과정에서, 조직 주체들은 이해집단의 기득권과 투쟁노선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, 조직 내부 압력과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지도력이 필요
 - 97년 노동법 개정과 98년 노사정위원회 경험은 합리적 대화와 설득구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협약도 만들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김

Ⅱ. 스웨덴 사회적 협약의 정치

1. 사회경제적 배경

- 1900년대 전후 유럽에서 사회계급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나라
 - 스웨덴 초기산업은 천연자원과 목재에 의존, 노동자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돼 노조가 발달하지 않았으나, 외국자본 유입 이후 노조 조직화 및 전투적 성격이 강화
 - 1879년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한 이후 노사간 유혈충돌이 계속되었고, 1880년대에는 노동자 조직화가 급속히 진행돼 1898년 중앙노동단체로서 노동조합총연맹(LO)이 결성됨
 - 사용자도 1902년 스웨덴사용자연맹(SAF)을 결성하여 대응하기 시작
- 1905년 전국단위 대규모파업이 발생해 8개월간 지속된 결과로, 1906년 스웨덴 최초의 합의인 '12월 협약'을 체결
 - 그러나 1909년 다시 6개월간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고, 이후에도 노사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
- 스웨덴 보수 집권당은 노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고수
 - 1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는 최악이었고, 보수와 사민주의자의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인해 정치권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은 상실된 상태
 - 1928년 정부는 단체교섭법을 제정하여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강제하고, 단체협약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게 되었는데, 노동자들은 단체교섭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

2. 사회적 협약의 등장과 전개과정

- 1932년 사민당 정부 등장이 사회적 협약의 전환점
 - 좌파정부 등장과 중재노력, 대공황 등 경제적 시련을 배경으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고,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, 정부의 개입보다는 LO와 SAF의 주도로 진행
 - 1936년부터 노·사·정 산업평화협상이 시작해, 2년간 협상한 결과 1938년 살쯔요바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, 스웨덴식 사회협약 모델의 출발이 되었음
 - 1952년 LO와 SAF에 의해 공식 합의한 렌-마이드너 모델(Rehn-Meider Model)은 연대임금정책을 핵심으로 하는데, 이 합의 역시 83년까지 중앙임금교섭으로 정착되었음
- 살쯔요바덴 협약 이후 스웨덴은 약 40여년간 협약이 지속되었으며, 1970년대 후반부터 균열이 생기고, 1991년 SAF가 공식적 협약 붕괴를 선언할 때까지 유효한 협약이었으며,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평가 받고 있음

1) 살쯔요바덴 협약 : 스웨덴 대타협 모델

□ 협약의 기본내용

- 노사의 상호존중
 - 사용자는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노조는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인정
 - 사용자에게는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노동자에게는 파업과 단체교섭의 권한을 인정
- 노사간 분쟁 해결과정 명문화
 - ‘책임이 따르는 자유’(freedom under responsibility)를 전제로, 노사 협상을 의무화하는 협상 절차를 마련
 -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

- 노사분규 과정에 제3자 개입도 제한해 전적으로 노사 자율로 진행하도록 함
- 노조가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, 사업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

○ 중앙임금협상 제도와 노사중재기구 구성

- 스웨덴 노사 대표는 임금협상체계를 핵심 대표조직인 LO와 SAF로 중앙 집중화하는데 합의
- 노동위원회 구성 : 노사 대표 각각 3명으로 구성해 노동관행과 분쟁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, 중재와 협상을 동시에 수행할 권한을 행사

□ 평가

○ 노·사·정 사회적 대타협 정착

-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중앙 차원의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, 정부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

○ 사민당 중도노선의 성과

- 사민당은 노조의 요구가 과격하면 여론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노조를 설득하여 사회적 대타협에 끌어들이었음
- 사민당 핵심 이론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(Ernst Wigforss)는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완전 고용을 강력히 추진한 인물임

 **에른스트 비그포르스의 ‘인민의 집’ (People's Home)**

국가와 사회가 가정에서처럼 불평등과 억압이 없이 평등, 단결, 협력과 우애로 활력이 넘치는 시민들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

2) 렌-마이드너 모델(Rehn-Meider Model) :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

□ 기본목표

- 경제목표를 ▲완전고용 ▲산업합리화 ▲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설정
 -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, 연대임금정책과 긴축재정정책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기했고, 핵심내용은 연대임금정책에 있음
- 추진배경
 - 1940년대 말 경기침체와 사민주의 연합세력내 갈등, 농민당의 연정 이탈 등으로 스웨덴 정치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졌음
 - 사민당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LO에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게 되었고, 이후 노사는 렌-마이드너 모델을 정책노선으로 채택
 - 1952년 LO와 SAF는 렌-마이드너 모델을 협정에 의해 공식화 하였고, 이후 약 30년간 스웨덴 모델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음

□ 기본내용

- 연대임금정책
 - ‘동일노동 동일임금’의 원칙하에 산업별, 기업별 임금편차를 축소하여 노동자의 연대성을 촉진
 - 경쟁력 상실 산업과 한계기업의 자연도태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
 - 고임금 부문의 임금인상 자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보증연금 기금으로 흡수해 경쟁력 강화 및 복지비용으로 사용
 - 실업자 발생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제, 흡수를 추진
- 긴축재정정책
 - 정부는 인플레 억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, 간접세 인상을 통해 충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이윤을 축소시켜 임금상승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강구

- 기업이윤 축소로 유발되는 투자위축 문제는 공공저축과 신용시장의 통제로 해결토록 하며, 이를 위해 1959년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증연금기금을 설립함

○ 적극적 시장정책

- 실업자 구제와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함
-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한계기업을 정리하여, 노동자들을 저임금 저생산성 산업으로부터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
-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조, 고용확대, 장애인 고용촉진, 직업훈련, 직장 이동 보조금 등이 포함되었음

□ 90년대 이후 노사관계 변화

- 1990년대 들어 스웨덴 경기는 침체되고,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(1993년 8.2%) 거대 다국적 기업의 비중 증가해 더 이상 사회적 협약이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

- 1990년 이후 노사관계 변화 원인은 크게 3가지로, 첫째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복지부담, 둘째는 노동자 조직의 변화, 셋째는 교섭력의 분권화 경향을 지적

① 복지부담 증가 및 글로벌화

- 1980년대 중반부터 해외 자본투자가 급속히 증대, 노사간 타협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

- 1980년 수출비중이 GNP 55%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수출 거대기업들은 내수 부양 정책과 내수창출의 주요 원천이었던 복지제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

- 스웨덴 다국적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정책과 갈등을 초래

② 노동자 조직의 변화

- 복지국가 추진 및 공공부문 확대로, 전국 단위 노조연맹인 LO와 사용자단체 연맹인 SAF간 중앙교섭 역할이 약화

- 40%를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존의 생산직 중심의 LO의 독점력을 약화시킴

③ 교섭의 분권화

- 사용자 단체인 SAF 역시 중앙집중적인 교섭구조가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, 교섭구조를 산업별로 분권화하기 시작함

- 1991년 사용자 단체는 코포라티즘적 대표체제 (corporatist representation) 철수를 결정

- 90년대 과거 불개입 입장과 달리, 정부가 주도하는 노·사·정 삼자간 협의를 시도했으나, 노조연맹과 사용자 연맹 모두 직접 참여하지 않음

☞ **코포타리즘**

조합주의라는 번역어가 unionism과 혼동되며, ‘조합’이란 용어는 계약에 기초한 근대사회적,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코포라티즘이 갖고 있는 유기체적(organic)이며 공동체적인(gemeinschaft)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(최장집, 1983).

1997년 코포라티즘이 학술적인 용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실제의제도 및 정책으로 채택되는 계기가 된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, 학계 및 일반 저술에서도 ‘사회적 합의주의’가 점차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.

Ⅲ. 스웨덴 모델 성과와 비판

□ 성과

① 경제적 불균형 해소

-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보장하고, 빈부격차를 해소하며,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모델로 평가
- 1950년대 이후에는 1~3% 수준의 저실업률을 유지해 국민 모두를 복지국가의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 조달자가 되게 함
- 스웨덴식 복지사회는 누진세 강화와 광범위한 사회보장 등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

② 정치적 안정 유지

- 1936~1972년의 기간 동안 사민당이 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, 안정적인 정치 체제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으로 작용
- 사회적 협약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으로 작용하면서,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음

③ 산업평화 정착

-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, 적대적 노사관계나 전투적 노조의 등장을 예방하는 역할
- 임금 격차 해소는 노동계급의 분열과 대립을 막고, 중앙임금교섭제도는 노조 조직의 선명성 경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됨

□ 비판적 평가

- 살쯔요바덴 협약은 노조 자율성을 제약하며, 노동자에게 산업평화 유지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으며, 노동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계속되었음

○ 대기업의 소유 집중

- 연대임금제 실시로 축적된 사기업의 이윤을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스웨덴식 모델은 오히려 소유구조 집중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

○ 노-노 갈등

-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양산으로 귀결되었고, 이로 인해 공공부문 화이트 노동자 비중이 증대하고, 생산직 노동자와 노-노 갈등을 야기하는 모순적 결과도 초래

□ 최근 스웨덴 복지국가 변화 관련

○ 스웨덴 복지 제도 변화

- 2006년, 2010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패배와 우파연합의 집권으로 ‘고부담 고복지’ 복지제도는 일련의 개혁이 진행
- 2005년에 상속세, 2008년에는 부유세 폐지,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56%에서 46.4%로 하향 조정

○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복지국가

- 스웨덴이 세계금융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하면서 복지국가의 저력을 재확인
- 2010년 경제성장률 5.5%, 고용률 평균 72.2% (OECD 평균64.8%),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 건전, 세계경제포럼 “국가경쟁력보고서”에서 스웨덴은 세계 2위를 차지

☞ **최연혁 교수 (스웨덴 예테보리대 교수)**

“스웨덴은 영·미나 유럽대륙보다 사회안정적이며 세계금융위기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”

“일부 한국의 우파는 스웨덴의 이같은 성과가 시장주의적 개혁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, 기본적으로 ‘복지 체력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”

○ 스웨덴 복지제도 지속

- 스웨덴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30% 전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, 있으며,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제도의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기초를 유지
- 교육과 보육, 의료서비스도 무상에 가까운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

IV. 한국사회의 대타협 적용 시사점

1. 사회적 협약 필요성 증대

- 사회적 협약은 경제성장과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, 스웨덴 모델은 한국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됨
 - 일부에서는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 등을 지적하며, 하향식 스웨덴 모델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
 - 경제규모와 관련, 서구의 작은 나라의 성공 사례는 한국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는 한국과 일치한다는 주장 등 논란 지속
- 최근 사회적 대타협 논의는 복지와 증세문제,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,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대타협의 필요성도 제기
 - 노·사·정 각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지 않으면,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도 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

2. 한국사회의 협약 추진 사례

- 한국사회의 대타협 경험은 김영삼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김대중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 불과하고, 성과도 미미함
-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
 - 김영삼정부의 ‘신노사관계 구상’선언에 따라,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와 노동법 개정 활동 추진
 - ‘노사의 자기혁신 과제와 정부의 역할’과 ‘노동관계법·제도개선의 기본방향’에 합의
 -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사공익 9인위원으로 구성, 노동법 개정작업 추진
 - 추진과정에서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‘합의·미합의안’을 작성하여, 96년말 여당 단독처리 되었으나,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노동계의 파업이 진행됨으로써, 다시 여야간 타협을 거쳐서 1997년 3월에 재개정

□ 1998년 노사정위원회

- 노사정 및 정당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, 이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합리적인 고통분담을 목적으로 구성
 - 1기 노사정위원회, '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·사·정간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' 채택
 - 실천방안으로 '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', '실업대책' 및 '사회보장제도 확충', '노동기본권 보장', '노동시장의 유연성' 등 노·사·정 대타협 도출
- 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55개 퇴출기업 발표 및 정부의 5개 시중은행과 11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 발표 등이 잇따르자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7월에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
- 노사정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전환했으나,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하여 유명무실한 상태

3. 사회적 협약 관련한 시사점

□ 보수정부의 사회적 협약 추진 관련

- 스웨덴은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한 좌파 사민당 정부가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는데, 한국의 보수정부가 정치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
 - 한국사회가 첨예한 이념대립으로 갈등만 연출하고 있어 중도적 공론과 타협의 입지가 매우 축소돼 있고,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힘든 상황이 지속
 - 중도우파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
 - 집권세력의 이념 성향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실행의지, 사회적 신뢰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

 **우파정부의 사회적 협약 주도**

네덜란드 중도우파인 루버스 내각 바세나르협약 주도
오스트리아 제2공화국,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대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

□ 사회적 협약과 재벌

- 스웨덴 산업구조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,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고, 발렌베리 가문을 대표로 하는 재벌들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소유지배력을 행사
 - 강력한 사민주의 정당과 노조가 주도하는 국가에서, 재벌과 같은 기업지배 구조를 용인해온 것에 주목할 필요
 - 사회적 협약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벌들의 소유권을 보장한 대신, 고용의 누진세와 투자, 고용 등을 보장받는 방안에 합의
 - 오너 중심 경영의 장점을 기업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, 그 성과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대목

☞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과 사회적 협약

- 스웨덴 사회대타협 과정에서 최대 재벌 발렌베리 등의 소유권과 가족 지배를 보장한 대신, 차등의결권, 분배 및 고용 메카니즘 도입으로 견제장치를 마련
 - 창업 후 150년 동안 6대째 오너경영을 이어온 발렌베리 가문은, 1938년 차등의결권을 보장받는 대신 85%의 누진소득세를 받아들이고 투자와 고용,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 국민경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
 - 차등의결권 주식이란 다른 주식에 비해 의결권을 많이 갖는 대신,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은 제한하는 주식
 - 발렌베리가 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지분의 22%만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47%를 행사
- 발렌베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면에는 철저한 경영 전통이 자리잡고 있음
 - ‘소유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’이라고 생각하는 발렌베리가의 전통과 기업들의 철저한 독립경영과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원칙
 - 세습경영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 등 발렌베리 가문의 사회적 책임감과 투명한 경영윤리가 존재함

□ 사회적 협약의 기초

○ 노·사·정의 상호 존중과 역할 분담

-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협약 당사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, 노동계는 노동 유연성과 임금 억제 방안을, 사용자는 고용확대 및 재원 부담 증대 방안을, 정부는 복지 확대 및 실업 대책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함
- 어느 일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대타협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오히려 협약 당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
-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기업적이고 노동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타협을 추진한다고 인식되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게 되며,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상실하고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

○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과제

-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은 노·사·정의 신뢰,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처신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에 유의할 필요
-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각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, 대타협이 특정 정책의 추진수단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함

○ 사회적 협약은 국민대통합의 용광로

- 사회적 협약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, 사회복지의 한 단계 끌어올리고, 시민사회와 노동·기업·정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
-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, 지역 및 계층 갈등, 이익집단의 충돌 등이 사회적 협약을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참고문헌

-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(2008) 사회적대화의 경험과 시사점 : 아일랜드, 네덜란드, 핀란드, 프랑스, 스웨덴 연구자료.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.
- 김순양 (1999).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여건 분석. 한국행정학보, 33(3), 215-236.
- 선학태 (2006).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: 서유럽 정책협약의와 갈등조정 시스템. 파주: 한울아카데미.
- 송호근 (2001). 세계화와 복지국가 : 사회정책의 대전환. 서울: 나남출판.
- 신순철 (2004). 사회협약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-역사적 연구: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.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.
- 안재홍 (2001).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쇠퇴 :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시적 비교. 국가전략, 7(3), 107-145.
- 안재홍 (2002). 세계화와 노·사·정 대응의 정치경제: 스웨덴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 사례의 비교. 한국정치학회보, 36(3), 397-418.

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,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「여연브리프」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「여연브리프」의 전문을 www.ydi.or.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여의도연구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
전화: (02) 2070-3300 팩스: (02) 2070-3331 (우 150-729)